

日本特許廳, 商標法改正 착수

서비스마크 92년부터 保護예정

日本特許廳은 서비스마크를 오는 92년부터 보호하기 위해 商標法의 개정에 착수, 개정안을 내년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日本은 현재 서비스마크를 △동일 마크의 경우 선사용을 인정하며 △이미 알려진 마크에 대하여는 사용을 인정하되 登錄은 불허하고 △외국의 저명한 마크는 사용하고 있는 외국기업이 日本에 登錄되어있지 않더라도 日本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이미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자, 변리사, 중소기업자 등으로 구성된 「工業所有權審議會」에서 내년 봄까지 결론지를 방침이다.

이러한 日本의 제도도입의 배경에는 올해 봄에 미국의 통상대표부가 외국무역장벽보고서에서 日本은 서비스마크도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라는 등 비판과 美國의 강력한 요구에 서 비롯되었다.

현재 서비스마크를 보호해 주지 않는 나라는 日本, 스위스 등이고, 88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이 기사는 덧붙이고 있다.

日本特許廳은 지난 7월 19일 퇴직한 심사관을 「고급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재고용,

심사의 신속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는 日本의 特許·實用新案의 심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이를 조사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심사관재식시 경험을 심사적 체해소를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日本特許廳은 퇴직심사관 100명 정도를 올해 중에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C지역간 統合되면 特許權도 保護강화

EC집행위원회와 EC회원국 전문가들은 EC가 통합되면 회원들은 민감품목의 보호를 위해 特許權, 商標權 등 知的 所有權의 보호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EC는 1992년 유럽공동체의 통합을 앞두고 의약산업을 통합하기 위해 단일 의약特許 기관의 설립과 特許審查의

간소화, 特許보호기간의 확대 등 의약산업전반에 걸친 통일된 特許制度를 시행할 예정인데, EC는 신개발의약품에 대한 特許보호문제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다.

美, 上院

'89知的所有權法 발의

美國의 상원은 特許보호가 적절치 못한 나라에 대해서 ITC가 特許侵害을 인정하고, 수입배제조치를 결정하면 대통령이 이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89知的所有權保護法案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내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록펠러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美國特許, 商標廳長에 대해 美國의 特許保護를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의 리스트를 작성토록 하고,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ITC는 美國 소비자들에게 주는 영향과 관계없이 당해제품의 수입배제 또는 정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소련총람

북방권연구회 편

출판: 법경출판사

규격: A5신·318면

가격: 5,000원

판매: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타